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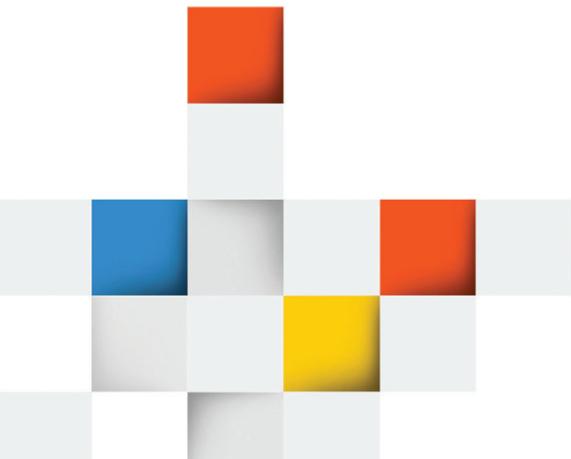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의 인구규모는 2020년 현재 5,178만 명이며, 조만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대 후반에 4,000만 명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한국의 출산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저하를 지속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수명이 선진국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아졌다.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조사망률과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등 퇴행성 질환과 아울러 자살에 의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서울 인구의 경기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와 세종은 유입인구와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 한편,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들의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하였다.

인구 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 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인구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감소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서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은 사회생활과 생활양식의 모든 측면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혼,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현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인구 영역의 파급효과를 자료의 형태로 포착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력의 저하와 고령화 추세,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도시화와 지역인구의 변화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 인구 DB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인구성장 구조의 변화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한국 인구는 1980년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제1차 인구변천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적 대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인구 규모는 2020년 현재 5,178만 명으로 세계 28위에 해당하며, 인구성장률은 0.14%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의 인구추세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감소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206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유소년 인구(0-14세)는 각각 2020년 규모의 47.8%와 50.5%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20년의 2.2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2050년대 이후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60세 이상 인구가 두터워지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수준,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파악된다. <표 I-1>에는 1990년 이후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1990-2019

	1990	2000	2010	2019 (%)
성				
남자	50.2	50.2	49.7	49.9
여자	49.8	49.8	50.3	50.1
연령				
0-14세	25.7	21.0	16.2	12.6
15-64세	69.4	71.7	72.5	71.9
65세 이상	5.0	7.3	11.3	15.5
거주지				
시(동)	74.4	79.7	82.0	81.5
읍	8.3	8.1	8.6	9.7
면	17.3	12.2	9.3	8.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4	25.7	20.3	17.1
중학교	18.5	13.6	11.9	10.5
고등학교	34.0	34.6	31.2	30.8
대학 이상	14.1	26.1	36.6	41.7
혼인상태				
미혼	33.0	30.1	30.6	31.3
유배우	59.1	60.6	57.7	55.9
사별	7.2	7.4	7.6	7.6
이혼	0.8	1.9	4.0	5.1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수준별 인구와 혼인상태별 인구는 각각 6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199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9년 성, 연령, 거주지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결과임, 2019년 교육수준과 혼인상태는 2015년 등록센서스의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가 여자 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남녀 인구의 비중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각각 49.7%와 50.3%로 집계되었고, 2019년에는 그 차이가 줄어들어 각각 49.9%, 50.1%로 여자 인구의 비중이 약간 높은 상태이다.

연령구성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그림 I-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는 2020년 현재 항아리 형태를 보이며, 2050년대에 이르면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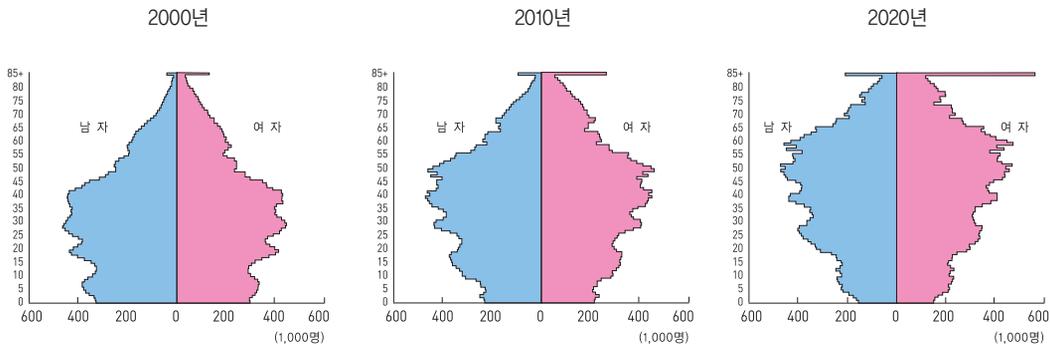
〈표 I-1〉에서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19년 12.6%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15-64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69.4%에서 2000년 71.7%, 2019년 71.9%로 약간씩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7년

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바뀌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90년 비중의 3.1배로 커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1990년에는 도시 인구 비중이 74.4%에 도달하였다. 도시 인구의 비중은 2010년과 2019년에 각각 82.0%와 81.5%로 높아졌으며,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하면 그 비중이 두 해 모두 약 91%에 이른다.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1990년 이후 8-9%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편,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17.3%에서 2010년과 2019년에 각각 9.3%와 8.8%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한국 인구의 교육수준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내국인 인구의 비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최근 변화, 2000, 2010, 202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2019.



중은 1990년 33.4%이었으나 2000년 25.7%, 2015년 17.1%로 꾸준히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그 비중이 각각 10.5%와 30.8%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90-2015년의 기간에 14.1%에서 41.7%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2.0년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미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배우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결혼 지연과 비혼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25-29세와 30-34세 인구의 미혼자 비중이 2015년에 각각 83.9%와 46.9%로 높아졌다. 사별자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이혼자의 비중은 1990년 0.8%에서 2000년 1.9%, 2010년 4.0%, 2015년 5.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이혼자의 비중은 50-54세에서 10.8%로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초저출산의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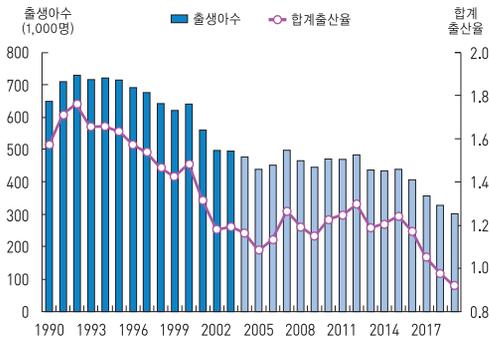
한국 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1985년 기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2

단계로 구분된다. 제1차 출산력 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이 출산력 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제2차 출산력 변천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제1차 출산력 변천에서와는 달리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무실해졌고, 출산 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 제도를 포함하여 인구성장 억제정책이 폐지되었다.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대두,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어난 급격한 출산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다.

한국에서 출산력 저하는 1990년대 말의 외환 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2]를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9만 명과 1.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2000년에 출생아수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9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와 합계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림 I-2]에서 주목할 것은, 출산수준이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약간 반동의 조짐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저하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출생아 수는 2006년 45.2만 명, 2007년 49.7만 명으로 반등한 후 2012년 48.5만 명, 2014년 43.5만 명, 2016년 40.6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9년에는 30.3만 명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저출산의 덫'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6, 2010년 1.23, 2015년 1.24, 2017년 1.05, 그리고 2019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0.92로 집계되었다. [그림 I-2]에서 2006년과 2007년, 2012년에 출산수준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쌍춘년, 황금돼지띠 및 용띠의 해 등 출산년도 선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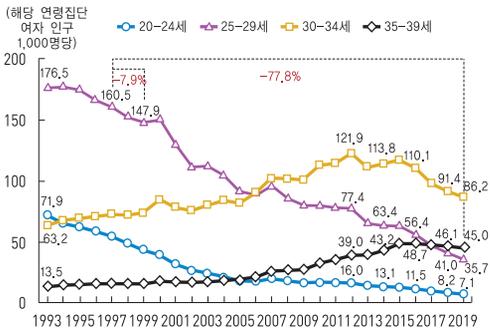
수 있다.

한국 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그리고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당연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인신고 집계 결과에 따르면,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각각 27.8세와 24.8세였으며 이후 매년 0.1-0.4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각각 33.4세와 30.6세에 도달하였다. 여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를 낳은 평균 출산연령과 전체 자녀에 대한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각각 32.2세와 33.0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도 33.3%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된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림 I-3]에서 여자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집단의 출산율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불과 2년 동안 7.9% 그리고 2019년까지 무려 77.8%가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자의 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5-39세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20-24세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I-3] 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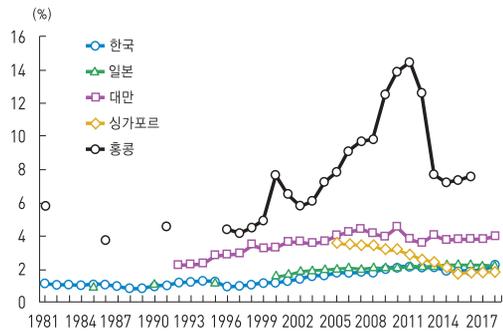
주: 1) 연령집단별 출산율=(산모의 연령집단별 출생아수÷해당 연령집단의 여자 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최근에 이르러 혼외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거와 혼외출산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록 완만한 증가추세가 감지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혼외출산율은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7,166건의 혼외출생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출생아 수의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혼외출산율이 3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의 서구 국가들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그림 I-4]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초저출산을 나타내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혼외출산의 비중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단지, 홍콩은 시기에 따라 큰 폭의 변화가 관찰된다.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린 소가족 지향의 태도와 규범들이 앞으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뚜렷한 경제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세

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출산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앞으로 한국 인구의 출산력이 반등하여 초저출산 상태를 탈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적 여건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4] 아시아 주요 지역의 혼외출산율 추이, 1981-2018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Statistics of Japan, e-Stat (<https://www.e-stat.go.jp/en/>).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 (Taiwan) (<https://www.ris.gov.tw/>).
Statistics Singapore (<http://www.tablebuilder.singstat.gov.s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ong Kong (<https://www.censtatd.gov.hk/>).

고령인구의 증가추세와 지역분포

현재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인구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단계로 진입하였다. <표 I-2>에 제시된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15.7%와 3.6%로 상승하며, 2067년 각각 46.5%와 20.7%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7

연도	인구 (100만 명)	인구 구성률(%)		중위 연령	노년 부양 인구비	고령화 지수
		65+ 인구	80+ 인구			
1960	25.0	2.9	0.2	19.0	5.3	6.9
1980	38.1	3.8	0.5	21.8	6.1	11.2
2000	47.0	7.2	1.0	31.8	10.1	34.3
2020	51.8	15.7	3.6	43.7	21.7	129.0
2040	50.9	33.9	10.2	54.4	60.1	345.7
2060	42.8	43.9	19.2	61.3	91.4	546.1
2067	39.3	46.5	20.7	62.2	102.4	574.5

주: 1) 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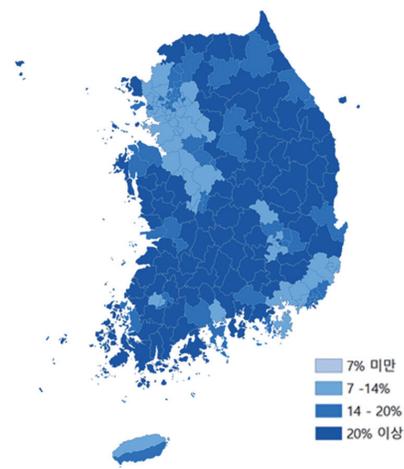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2019.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 인구의 중위 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추세를 보인다. <표 I-2>에서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43.7세로 높아지며 2067년에는 무려

62.2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비는 1960년 5.3 수준이었으나 2020년 21.7로 증가한다. 그리고 2067년에 이르면 102.4 수준에 도달하여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고령화지수는 1960-2020년과 2020-2067년의 기간에 각각 18.7배와 4.5배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먼 지역이 많고 동 지역이 가장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I-5]에서 보는 것처럼, 경상북도(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역(합천군, 남해군, 의령군)과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신안군, 보성

<그림 I-5> 시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 2019



출처: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2020. 8. 28.



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동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울산, 화성, 세종, 오산 등의 도시지역에서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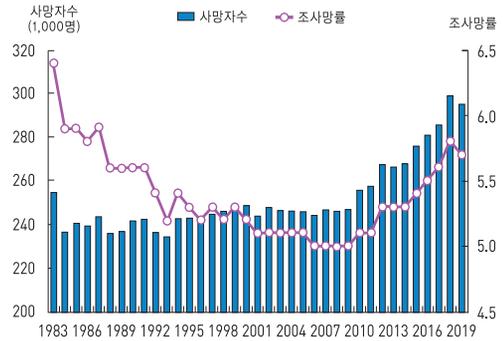
초저출산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 사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망률의 변화와 지역 편차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사망률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조사망률은 2006-2009년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9년 1,000명당 5.7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수 역시 2006년 24.4만 명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29.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그림 I-6).

[그림 I-6]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추이, 1983-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조사망률과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19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80세 이상의 사망자수가 지난 15년 간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 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3>을 보면, 한국 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 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선진국 평균값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기대수명을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모두 3.4년씩 더 긴 것으로 확인된다.



〈표 I-3〉 세계 인구나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5-2020

	조사사망률 (인구 1,000명 당)	영아사망률 (인구 1,000명 당)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세계 인구	7.5	29.3	69.9	74.7
선진국	10.2	4.5	76.2	82.3
개발도상국	7.0	31.9	68.6	72.9
아시아	6.9	24.9	71.2	75.5
한국	5.9	2.1	79.6	85.7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019.

사망률은 성, 연령을 비롯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수는 2019년 남자 16.0만 명, 여자 13.5만 명이며, 1,000명당 사망자수는 각각 6.3명과 5.2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0세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다. 연령별 사망률은 1세 이후 10세 정도까지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또한, 최근에는 남녀 인구의 사망률 격차가 40세를 넘으면서 현저하게 벌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극대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사망률의 수준은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2019년에 경기도(6.1만 명), 서울(4.4만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사망자가 12.0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0.5%를 차지하였다. 조사사망률(1,000명당)은 전라남도(9.0)와 경상북도(8.2) 및 전라북도(8.0)가 높고, 세종(3.8), 울산(4.6)과 서울(4.6) 및 경기도

(4.6)가 낮다. 그러나 각 지역의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은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도와 세종의 순으로 낮다.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하고, 그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동서양의 질병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최근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전염병에 의한 초과사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사망자수의 증가에 미친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선진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 반면,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비록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11년 31.7명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간씩 감소하여 2019년 26.9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1997년의 13.2명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림 I-7]에서 보는 것처럼, 1998년 이후 암은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장 질환, 폐렴과 뇌혈관 질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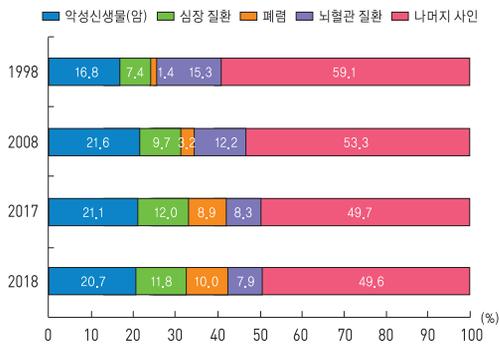


률은 20.7%, 심장 질환 11.8%, 폐렴 10.0%, 뇌혈관 질환 7.9%이다. 특히 최근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암이 제거된다고 가정하면, 2018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3.6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장 질환과 폐렴이 제거된다면 각각 1.4년과 1.0년의 수명 증가가 기대된다.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과 뇌혈관 질환,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에 의한 사망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폐렴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에 의한 고령집단의 사망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화와 지역인구의 변화

[그림 I-7] 주요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확률, 1998-2018



출처: 통계청, 「2018년 생명표」, 보도자료, 2019. 12. 4.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2019년 도시 인구의 비중이 81.5%에 도달하였다. 읍 지역 인구를 제외하면 농촌 인구의 비중은 8.8%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 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망원인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만, 동일한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는 사회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 발전에 기인하는 바 크다. 예를 들어, 20대와 30대에는 자살과 운수사고가 전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이 높아지면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다. 암은 40대 이후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 1위이다. 노인 집단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한국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 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I-4>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도시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울 인구는 1990년 1,06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10년보다 15만 명이 감소한 96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면적은 605km²로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 인구의 비중은 2019년 18.6%에 달한다. 또한, 서울 인구에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9

연도	(1,000명)					
	서울	서울 대도시권	수도권	시(동) 부	군(읍)면 부	전국
1960	2,445	2,938	5,194	6,997	17,992	24,989
1970	5,433	6,327	8,730	12,710	18,173	30,882
1980	8,364	10,744	13,298	21,434	16,002	37,436
1990	10,613	16,508	18,586	32,309	11,102	43,411
2000	9,895	19,441	21,354	36,755	9,381	46,136
2005	9,820	20,960	22,767	38,515	8,764	47,279
2010	9,794	21,875	23,836	39,823	8,758	48,580
2019	9,640	23,541	25,893	42,023	9,756	51,779

주: 1)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함.
 2) 서울대도시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4) 196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자료이며, 2019년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전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는 2019년 현재 전국 인구의 50.0%에 해당하는 2,589만 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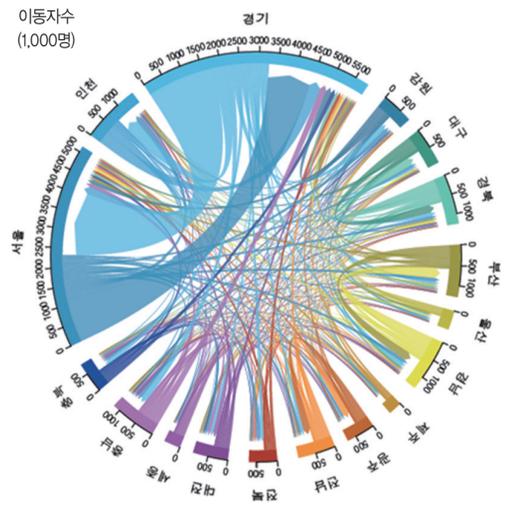
〈표 I-4〉를 보면,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의 인구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울과 이 두 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서울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가 서울 근교로 확산되고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확산되면서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0-1980

년 기간에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4%와 4.3%에 달하였다.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며 1990-2019년 기간에 97.3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서울 이탈 현상은 취학 자녀가 없는 30대 부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 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의 확산으로 대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I-8〉은 2015-2019년 기간 각 시도 간 전입과 전출 이동의 규모와 방향을 보여준다. 이 기간에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보다 12.5만 명이 많았다.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의 출발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그림 I-8〉 시도 간 전출 및 전입 인구, 2015-2019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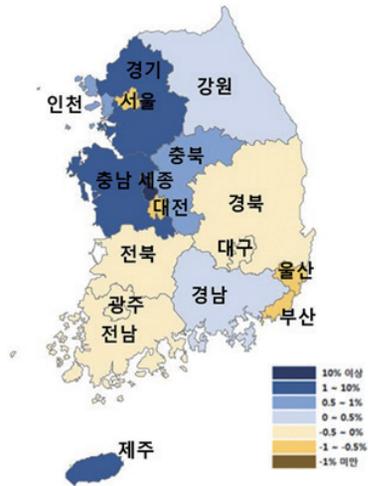
부산의 순으로 많았고, 전출인구의 목적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순이었다. 수도권 인구는 2020년 중반 2,596만 명에 도달하여 2,582만 명의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지역의 인구는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와 전입과 전출의 차이에 의한 순이동 인구에 의해서 변화한다. 우선 2017년 시도별 자연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남, 강원, 전북, 경북, 부산에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루어졌다. 자연감소는 2042년에 이르면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권역별로는 2017년 호남권과 영남권의 지역인구가 자연감소를 시작해 2018년에는 중부권으로 확대되었으며, 2032년에 이르면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권역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자연증가와 이동을 감안한 성장률을 살펴보면, 부산(1996년)을 시작으로 서울(2010년), 대구(2012년), 대전(2015년), 광주(2016년)가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로 이미 진입하였다. [그림 I-9]에 제시된 2017년 시도별 인구성장률을 보면, 세종은 12.46%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인 반면, 서울(-0.78%), 부산(-0.66%), 울산(-0.64%), 대전(-0.55%), 광주(-0.45%), 전북(-0.37%), 경북(-0.31%), 전남(-0.18%), 대구

(-0.14%)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참고로, 2017년의 전국 인구성장률은 0.28%였다.

[그림 I-9]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면): 2017-2047년, 보도자료, 2019. 6. 27.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1960-2019년 기간에 네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 인구는 무려 8.0배가 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에 네 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만 명에 불과하던 시(동)부 인구는 2019년 4,20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시 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군(읍·면)부 인구는 같은 기간 1,799만 명에서 97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지방에 성장거점도시와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